

최한별 “정부 혁신에 AI 유용...인간과 결합해 디지털정부 완성”

안희민 기자 | 승인 2025.04.17 18:25

지역정보개발원-디지털정부학회 공동개최 춘계학술대회서 밝혀



AI가 정부 혁신에 유용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간의 정치적, 윤리적 판단을 더하면 보다 나은 디지털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인공지능(AI)이 정부 혁신에 유용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 정책학 이론이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하는 순기능도 한다. 인간의 정치·윤리적 판단이 더해지면 보다 나은 디지털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난 11일 한국디지털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한별 교수(군산대)가 발표한 내용을 17일 공개했다.

최 교수는 “AI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며 복잡한 사회문제를 더욱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과거 데이터 저장·관리·신속 전달 수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시간 분석, 패턴 학습, 예측 모델링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는 담당 공무원들이 더 복잡한 문제해결이나 주민 밀착형 기획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빅데이터와 AI알고리즘이 결합되면 데이터 기반 학습과 예측, 최적해 탐색이 가능해져 행정 업무 자동화, 정책결정 지원, 개인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령, AI를 활용하면 정책수립의 과학화와 증거기반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과 예측 모델로 여러 정책대안의 효과를 사전에 추정하고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어 정부 혁신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정책 시뮬레이션의 핵심틀로 디지털트윈을 꼽았다. 현실 데이터를 가상 공간에 구현해 현실에서 하지 못한 실험을 가상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다. 국내에선 인천, 세종 등이, 해외에선 싱가포르, 프랑스 렌느 메트로폴, 일본 시즈오카현이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최 교수는 정치·윤리 맥락에서 인간의 가치판단을 완전하게 대체하기 어려워 각 단계에서 AI가 제공하는 효율성과 예측성을 극대화하면서도 편향·격차·책임소재 문제를 관리할 제도와 거버넌스 설계에 인간의 역할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그는 “빅데이터와 AI가 정교해졌지만 데이터로 포착되지 않는 정성적 가치들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디지털정부 연구자는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과 데이터가 놓치는 것을 동시에 볼 줄 알아야하며 정치맥락에 대한 인간적 판단을 등한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민 기자 statusquo@hankooki.com